

2016.11.08

제 8 호

# KLSI

## ISSUE PAPER

[www.klsi.org](http://www.klsi.org)

###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목차]

제1절 정부 저출산 대책 평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혼인율 영향요인 분석

제4절 요약과 함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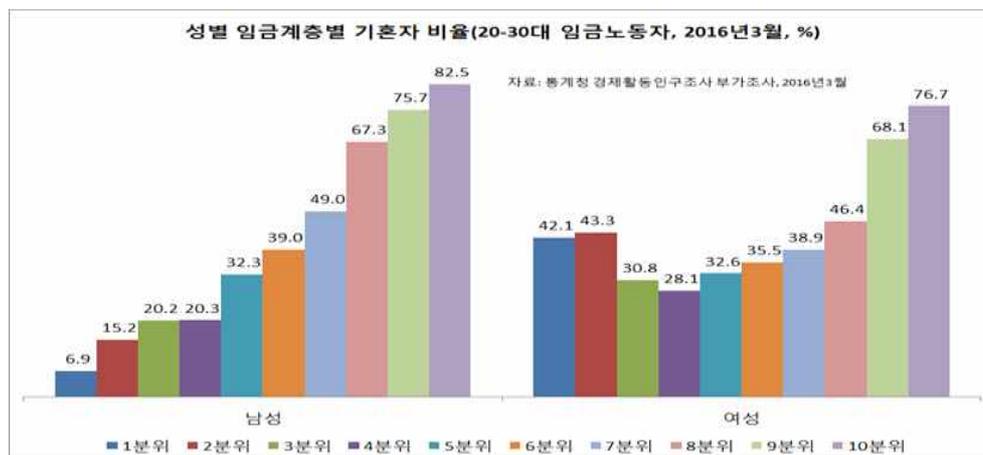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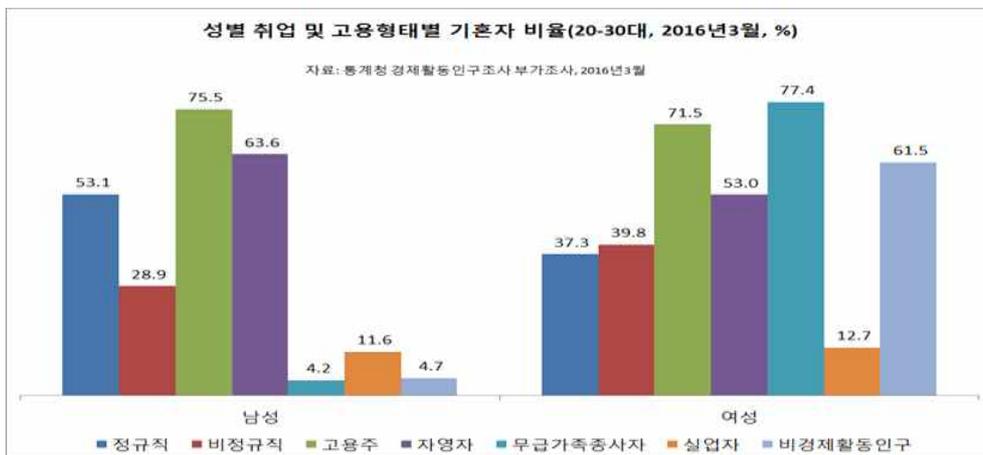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http://www.facebook.com/ksiedit)

### <요약>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이것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사회경제적 지위(고학력; 취업; 안정된 일자리; 적정임금수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성이 갈수록 결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남녀 모두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자녀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정책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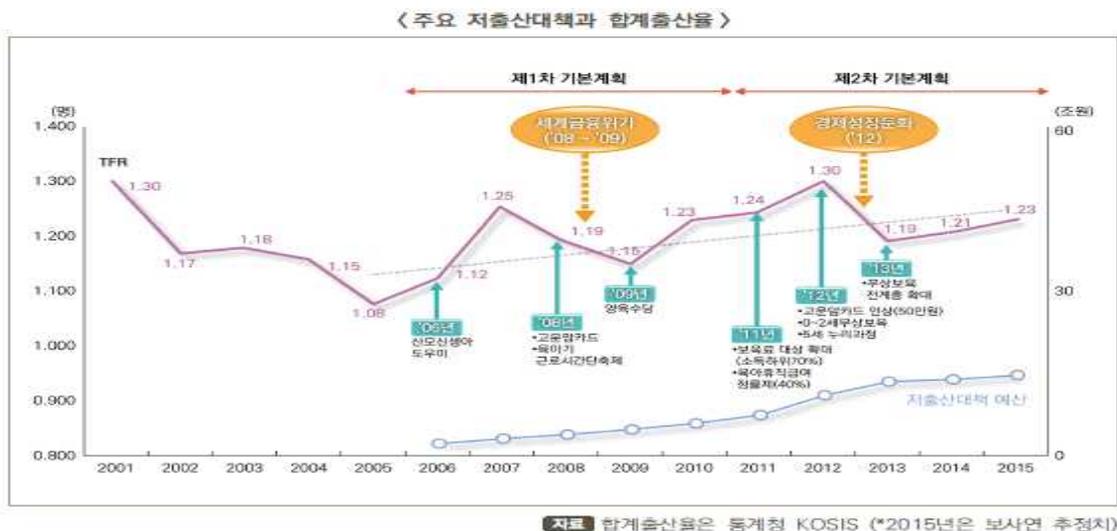
#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제1절 정부 저출산 대책 평가

○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한 1차, 2차 저출산 대책(2006~2015년)은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결혼 지원 등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총 80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 1차, 2차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난 10년간 국가책임 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했다. ②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1.08 쇼크(2005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대로 회복되었다. ③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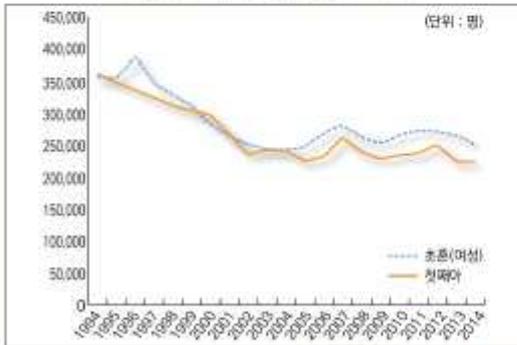
1) 이 글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2016.10.13) 토론회에서 파워포인트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일자리의 관점에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만혼·비혼과 출산율과의 관계**

- 만혼·비혼화에 따른 결혼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초래
  - \* 초혼연령 변화 : ('03) 男 30.1세, 女 27.3세 → ('14) 男 32.4세, 女 29.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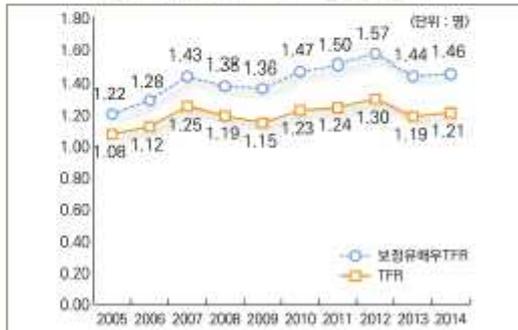
	기준연도 TFR	비교연도 TFR	기간 TFR 변화	요인별 분해	
				기혼여성 출산율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희우율 유지가정)	결혼률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희우출산율 유지 가정)
2005-2014	1.076명	1.205명	0.129명	+0.717명	-0.376명

〈 초혼건수와 첫째아 출생아수 〉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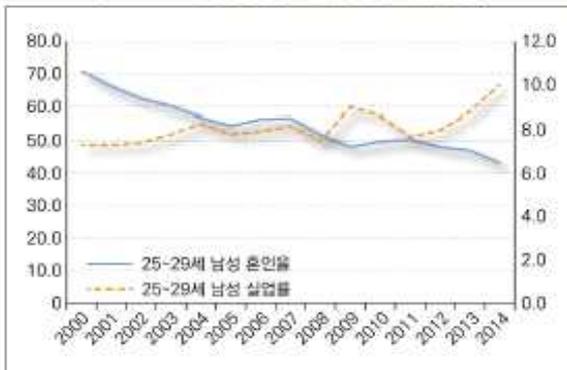
〈 합계출산율과 기혼여성 출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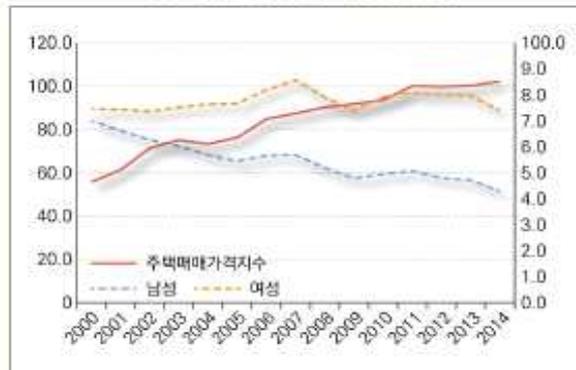
자료 초저출산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보사연, 2014)

○ 정부는 제3차 저출산 대책(2016~2020년)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①종전의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청년일자리아주거대책 강화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 ②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 확장. ③만혼 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 ④장시간근로, 여성중심 일·가정 양립, 배타적 가족관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개혁, '있는 제도'의 실천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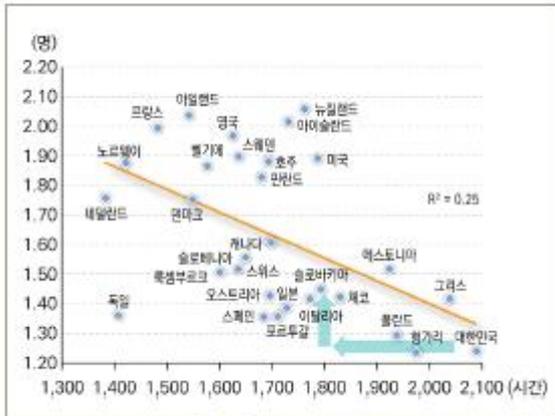
〈 25~29세 남성의 실업률과 혼인율 〉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혼인율 〉



〈연간근로시간과 출산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14)

〈남성의 자녀돌봄시간과 출산율〉



자료 OECD 자료 분석 ('13)

○ 제3차 저출산 대책(2016~2020년)은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①청년일자리, 주거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연령별 결혼률을 10% 제고(합계출산율 0.145 제고 효과)하고, ②임신·출산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등으로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향후 5년간 10% 제고(합계출산율 0.152 제고 효과)하겠다면, 일자리 대책 관련 성과지표로 청년 고용률,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연간근로시간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표1> 참조).

<표1> 제3차 저출산 대책 추진계획 일자리 대책 관련 성과지표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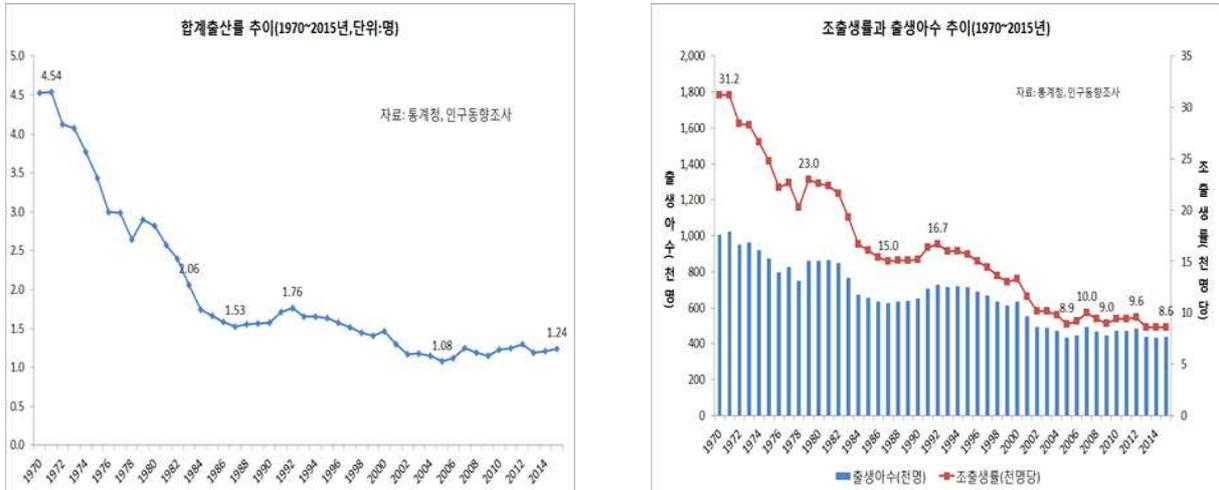
성과지표	현재 (2014)	목표 (2020)	출처	설정근거	관련과제
청년(15~29세) 고용률	40.7%	48%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평균 (50.9%)도달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과제 일학습병행 등
육아휴직자 중남성비율	5%	15%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연간 근로시간	2,057 시간	1800 시간대	OECD 통계	OECD평균 수준도달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15~64세)고용률	55.4%	62%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평균 수준도달	여성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 제3차 저출산 대책이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혼인을 제고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아 온 기존의 정부 노동정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청년고용의 질을 대폭 저하시킬 파견근로자 확대 법안마저 청년고용 활성화 수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4가지 성과지표 목표도 단순히 OECD 평균치를 옮겨 적어 놓은 것으로, 목표 실현을 가능케 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참고> 출산율과 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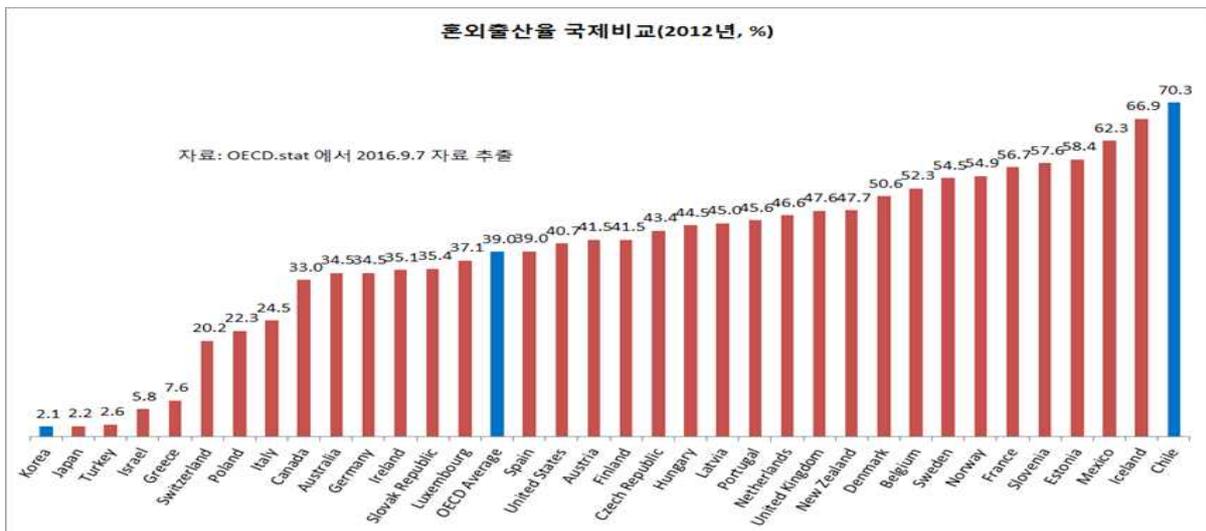
○ 합계출산율<sup>2)</sup>은 2005년 1.08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인구 천 명당 조출생률<sup>3)</sup>은 2005년 8.9명에서 2015년 8.6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05년 43만 5천 명에서 2015년 43만 9천 명으로 4천 명 증가에 그쳤다(<그림1> 참조).

<그림1>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출생아 수 추이(1970~2015년, 단위: 명)



○ OECD 34개 회원국의 혼외출산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2.1%로 가장 낮고, 칠레가 70.3%로 가장 높다. OECD 회원국의 혼외출산율 평균은 39.0%다(<그림2> 참조).

<그림2> 혼외출산율 국제비교(2012년, 단위: %)



2)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3) 조출생률 =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

○ 합계출산율은 혼인율과 기혼여성 출산율 두 요인에 좌우된다. 기혼여성 출산율은 2005년 1.22명에서 2014년 1.4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혼인율은 하락했다. 혼외출산율이 2.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

○ 조혼인율<sup>4)</sup>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0.6명 감소했고, 혼인 건수는 2005년 31만 4천 건에서 2015년 30만 3천 건으로 1만 1천 건 감소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4.2세 높아졌고, 여성의 초혼 연령도 25.3세에서 30.0세로 4.7세로 높아졌다. 남녀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14년 31.0세로 4.5세 높아졌다(<그림3> 참조).

<그림3> 조혼인율과 혼인건수, 초혼 및 첫출산 연령 추이(단위: 명, 세)



4) 조혼인율 =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은기수(1999),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18(1).

○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결혼적령기가 지난 여성은 순서규범(경제적 능력)보다 연령규범(결혼적령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남성은 여전히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순서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결혼 및 가정생활에서 남성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여성은 규범적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남성과 여성의 결혼시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차가 3~4세를 유지하고, 결혼적령기를 넘어선 여성은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는 점, 결혼생활에서 남성의 역할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부로 지위가 변한다는 점 등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시기가 남성의 결혼시기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임을 시사한다.

### 2. 김경화(2004),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일과 결혼- 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6(3).

○ 대졸 미혼여성 비정규직 23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방식과 결혼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여성은 결혼을 선택적으로 간주하거나 시험 뒤에 생각할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등 결혼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반면(7명),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수용하며 적응하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16명). 이들은 노동시장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기대를 걸고 가부장적 결혼제도로 편입되고자 했다. 이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결혼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의 단절과, 일을 계속하더라도 직장과 집안 일 사이에 있을 갈등을 예상하며, 계약직이나 시간제 비정규 노동을 결혼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3. 이상호·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2010.12.

○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건수 감소와 초혼연령 상승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혼연령 상승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임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결혼건수 감소, 결혼율 하락, 초혼연령 상승 등에 대해서는 경제학 차원에서 논의가 별로 없었다.

○ 시도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해서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고용불안정성은 소득불균형을 초래했고, 젊은 남녀의 결혼 시장 참여를 제약했다. 즉 고용불안정성 확대는 결혼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남성의 고용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초혼연령 상승은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으로 이어졌다.<sup>5)</sup> 둘째, 주택마련비용 상승은 결혼비용을 증가시켜 남성들의 결혼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실업의 증가는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시사점은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려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결혼 변수가 주택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4.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을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

○ 저출산 원인을 다룬 대다수 연구들은 주로 기혼여성의 출산 패턴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유배우 출산율(marital fertility rate) 이외에 기혼인구 비율 즉 유배우 비율(nuptiality rate)도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sup>6)</sup>

○ 따라서 출산율 감소가 유배우 비율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대부분 출산장려금, 양육·보육 지원 등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출산율의 감소가 미혼인구 비율이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기존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혼인의 결정요인과 유배우 출산율의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는 전적으로 유배우 여성비율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 하락은 합계출산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1991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출산율 하락을 상당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30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상승은 합계출산율의 하락폭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덜

5) 남성이 고용불안정 및 주거비용 마련 문제에 직면하면, 여성에 대한 청혼이 늦어져 남성의 초혼연령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승한다. 실제로 남녀 초혼연령은 상관계수가 높고, 남녀 나이 차이가 일정하다.

6) 우리나라는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배우 출산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주로 유배우 여성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날아서가 아니라, 결혼한 여성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혼기피 현상 원인으로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불확실한 경제상황,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5. 윤자영(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취업 지연과 불안정 고용은 남성을 ‘결혼할 만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소득활동이 결혼 조건으로 중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여성에게 취업은 결혼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해서 결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2008년 현재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이행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취업과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를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약화와 실업 만연은 결혼기피 또는 만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초래하는 만혼과 결혼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전세비용 보조, 자녀양육비 경감, 보육시설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이 요구된다.

6. 이상립(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 미혼율의 증가는 혼인을 늦추어 만혼으로 이어지며, 만혼의 증가는 여성의 출산 가능 기간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 연령의 증가 및 미혼율의 증가와 같은 혼인력 약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2000년과 2010년 사이 미혼율의 증가가 매우 극적으로 이뤄졌다. 혼인에 관한 연령 규범도 약화되고, 고령대에서 적극적인 혼인 포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직업자원과 관련해서 취업과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장시간 노동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7.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1차~7차 데이터를 사용해서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시간 해저드(discrete time hazard)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결과 첫째, 남성은 결혼사건 발생확률이 35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36세부터 감소하고, 여성은 33세까지 증가하다가 34세부터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층의 만혼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취업은 남녀 모두 결혼사건 발생확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취업한 남성은 미취업 남성보다 결혼사건 발생확률이 3배 정도 높다.

○ 셋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고용의 질에 해당하는 임금 변수는 남성의 결혼이행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남성의 결혼이행 확률은 17%지만, 100만 원인 남성은 6.5%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의 임금은 결혼이행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시뮬레이션 결과 최저임금이 5,580원(2015년)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면, 30세 남성의 미혼유지 확률은 92.4%에서 90.7%로 감소하고, 남성이 35세까지 계속 미혼일 확률은 74.4%에서 69.6%로 5%p 가까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비해 30세 여성의 미혼유지 확률은 81.8%에서 81.2%로 거의 감소하지 않고, 35세도 52.8%에서 51.6%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다.

#### 8.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2015.12.

○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13차(2000~2010년) 자료에서 2000년 20~30대 미혼 남녀 524명의 결혼여부를 10년에 걸쳐 추적해, 이산적 생존분석(Discrete-time Duration Analysis)을 수행했다.

○ 분석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만혼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남성 청년층의 감소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 첫째,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대졸여성은 고졸이하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Odds)이 0.91배로 약 8.5% 낮아지고, 여성 석박사 졸업자는 대졸여성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Odds)이 0.40배(59.6%)로 낮아진다.

○ 둘째, 경제력과 관련해서 남성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5배 높아지고, 직업이 상시직이면 상시직이 아닌 경우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0배 높아진다. 만 14세 때 가정형편이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인 경우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0.65배 낮아진다. 셋째, 탐색비용과 관련해서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대도시 출신과 인문계 문과 출신 여자는 결혼 확률이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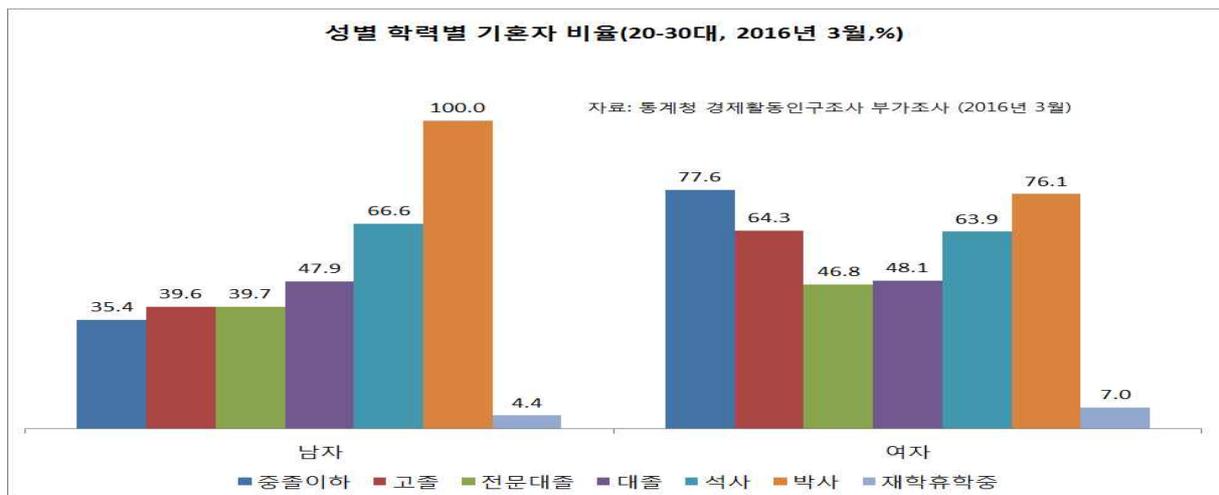
### 제3절 혼인율 영향요인 분석

#### 1. 기술통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성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기혼자 비율은 구할 수 있지만, 고용 형태와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은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별, 학력별, 취업 및 고용형태 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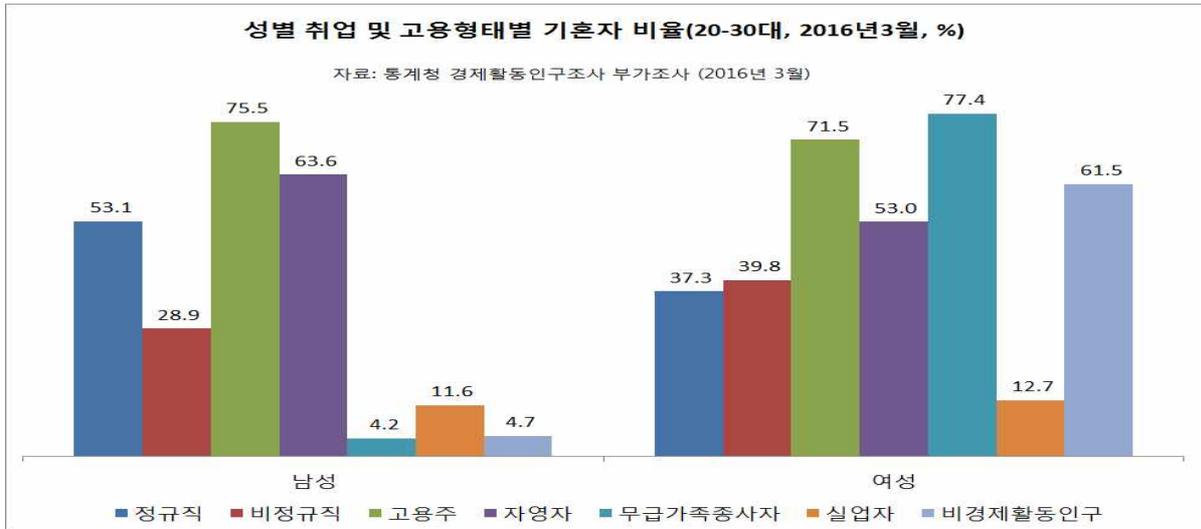
○ <그림4>는 2016년 3월 현재 20-30대 성별 학력별 기혼자 비율을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첫째, 학생은 남성(4.4%)과 여성(7.0%) 모두 기혼자 비율이 매우 낮다. 둘째, 남성은 ‘중졸이하(35.4%) < 고졸(39.6%) ≒ 전문대졸(39.7%) < 대졸(47.9%) < 석사(66.6%) < 박사(100.0%)’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다. 셋째, 여성은 ‘전문대졸(46.8%) ≒ 대졸(48.1%) < 석사(63.9%) ≒ 고졸(64.3%) < 박사(76.1%) ≒ 중졸이하(77.6%)’ 순으로, 전문대졸과 대졸 학력을 저점으로 학력이 높거나 낮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아지는 U자형을 그리고 있다.

<그림4> 성별 학력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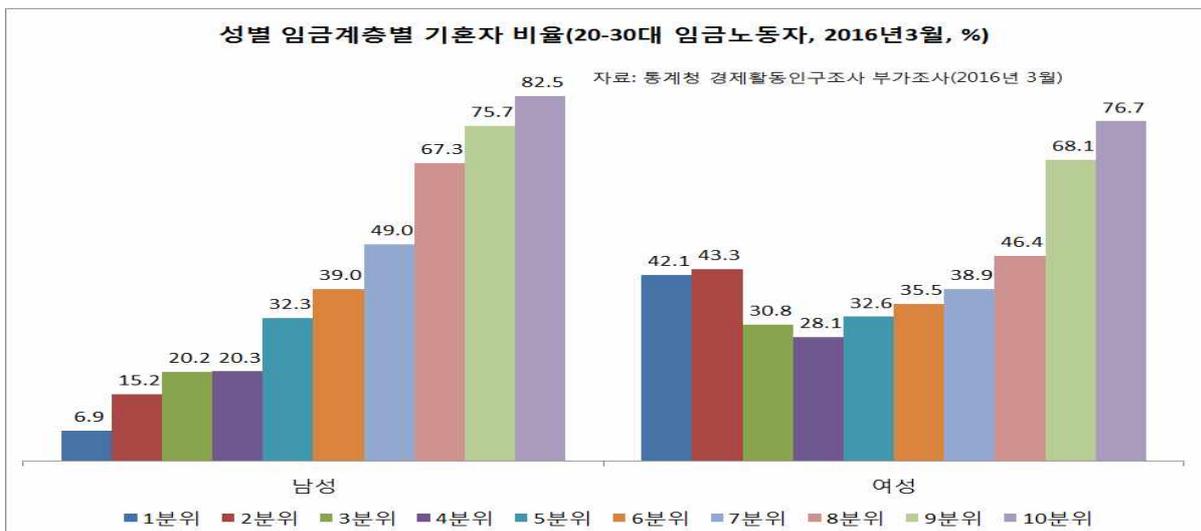
○ <그림5>는 2016년 3월 현재 20-30대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첫째, 남성은 ‘고용주(75.5%) > 자영업자(63.6%) > 정규직(53.1%) > 비정규직(28.9%) > 실업자(11.6%) > 비경제활동인구(4.7%) ≒ 무급가족종사자(4.2%)’ 순으로,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에 따른 기혼자 비율 차이가 뚜렷하다. 둘째,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77.4%) > 고용주(71.5%) > 비경제활동인구(61.5%) > 자영업자(53.0%) > 비정규직(39.8%) ≒ 정규직(37.3%) > 실업자(12.7%)’ 순으로, 무급가족 종사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기혼자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림5>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



o <그림6>은 20-30대 임금노동자들의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첫째, 남성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10%)는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상위 10%)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가장 높다. 둘째, 여성은 4분위를 저점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다. 즉 4분위(하위40%) 기혼자 비율은 28.1%고, 10분위(상위 10%) 기혼자 비율은 76.7%로 가장 높다. 남녀 모두 혼인과 임금수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6>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20-30대 임금노동자, 2016년 3월, 단위:%)



2. 로짓분석 결과 1

○ <표2>는 연령효과를 통제했을 때 성별, 학력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혼인 확률을 살펴보기 위한 로짓분석 결과다. 앞서 기술통계는 2016년 3월 자료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관측치를 늘리기 위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각년도 8월 자료를 결합해서 사용했다. 남성은 관측치가 13만 324개고 여성은 14만 6,767개며, 모형의 설명력은 남성이 37.9%, 여성이 48.2%다.

<표2> 혼인 확률 영향요인 (2003~2015년, pooled logit 분석, 20~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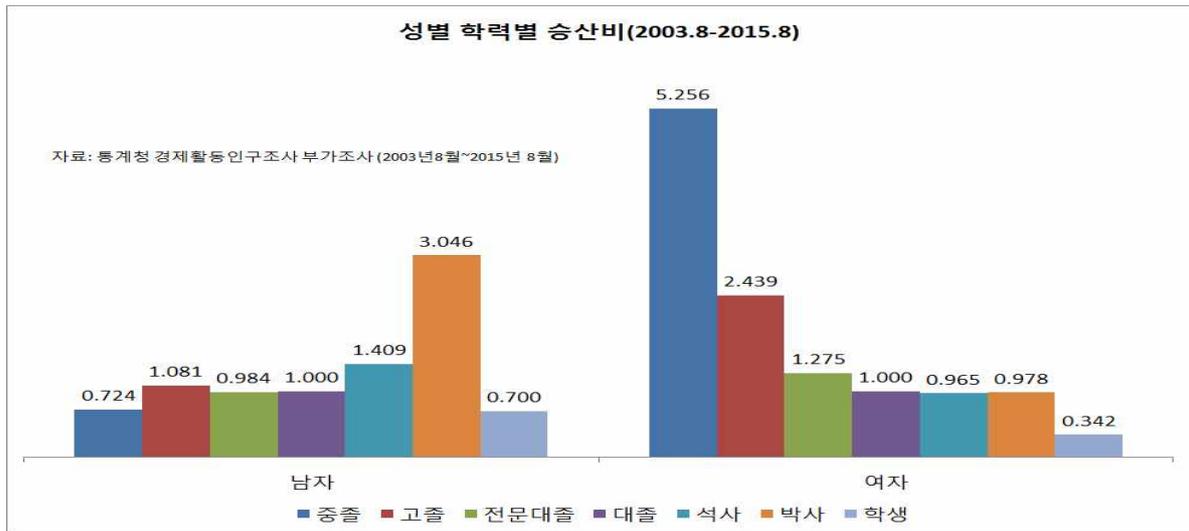
	남성				여성			
	계수값	P>z		odds	계수값	P>z		odds
연령	0.976	0.000	***	2.654	1.180	0.000	***	3.255
연령제곱	-0.011	0.000	***	0.989	-0.014	0.000	***	0.986
중졸	-0.323	0.000	***	0.724	1.659	0.000	***	5.256
고졸	0.078	0.000	***	1.081	0.891	0.000	***	2.439
전문대졸	-0.016	0.494		0.984	0.243	0.000	***	1.275
석사	0.343	0.000	***	1.409	-0.036	0.496		0.965
박사	1.114	0.000	***	3.046	-0.022	0.935		0.978
학생(재학휴학생)	-0.357	0.000	***	0.700	-1.074	0.000	***	0.342
비정규직	-0.615	0.000	***	0.540	-0.081	0.001	***	0.922
고용주	0.418	0.000	***	1.519	0.323	0.000	***	1.381
자영업자	-0.042	0.196		0.959	0.046	0.315		1.047
무급가족	-1.870	0.000	***	0.154	1.595	0.000	***	4.928
실업자	-1.394	0.000	***	0.248	-0.771	0.000	***	0.463
비경제활동인구	-1.962	0.000	***	0.141	1.628	0.000	***	5.096
2004년	-0.112	0.003	**	0.894	-0.092	0.026	*	0.912
2005년	-0.219	0.000	***	0.803	-0.216	0.000	***	0.805
2006년	-0.345	0.000	***	0.708	-0.297	0.000	***	0.743
2007년	-0.397	0.000	***	0.672	-0.319	0.000	***	0.727
2008년	-0.512	0.000	***	0.599	-0.375	0.000	***	0.688
2009년	-0.474	0.000	***	0.622	-0.433	0.000	***	0.648
2010년	-0.604	0.000	***	0.547	-0.500	0.000	***	0.606
2011년	-0.684	0.000	***	0.504	-0.551	0.000	***	0.576
2012년	-0.702	0.000	***	0.495	-0.600	0.000	***	0.549
2013년	-0.781	0.000	***	0.458	-0.611	0.000	***	0.543
2014년	-0.837	0.000	***	0.433	-0.659	0.000	***	0.517
2015년	-0.904	0.000	***	0.405	-0.799	0.000	***	0.450
상수	-19.052	0.000	***	0.000	-22.665	0.000	***	0.000
관측치	130,324				146,767			
모형설명력	0.379				0.4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8-2015.8 원자료  
 주: 대졸(학사), 정규직, 2003년을 기준더미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

○ <그림7>은 <표2>의 분석결과 중 연령과 취업 및 고용형태를 통제했을 때 학력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여기서 승산비(odds ratio)는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을 의미한다. 첫째, 남성은 승산비가 '학생(0.700) < 중졸이하(0.724) < 전문대졸(0.984) ≒ 대졸(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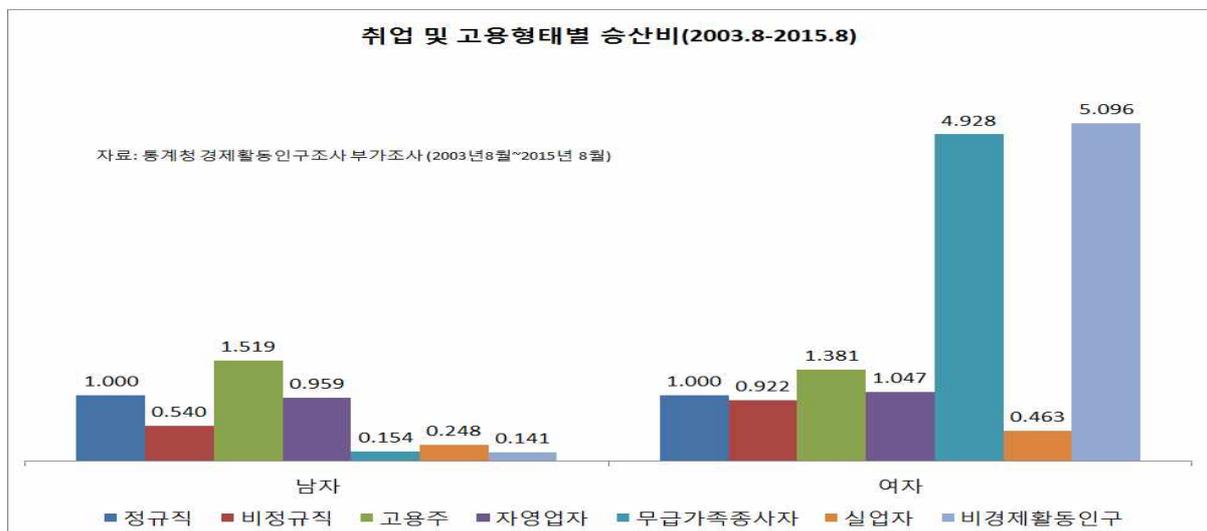
< 고졸(1.081) < 석사(1.409) < 박사(3.046)’ 순으로, 고졸을 제외하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둘째, 여성은 ‘중졸이하(5.256) > 고졸(2.439) > 전문대졸(1.275) > 대졸(1.000) ≒ 박사(0.978) ≒ 석사(0.965) > 학생(0.342)’ 순으로, 학생을 제외하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고, 대졸이상 고학력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혼인 확률이 가장 낮다.

<그림7> 성별 학력별 승산비(2003.8~2015.8)



o <그림8>은 <표2>의 분석결과 중 연령과 학력을 통제했을 때 취업 및 고용형태가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8>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승산비(2003.8~2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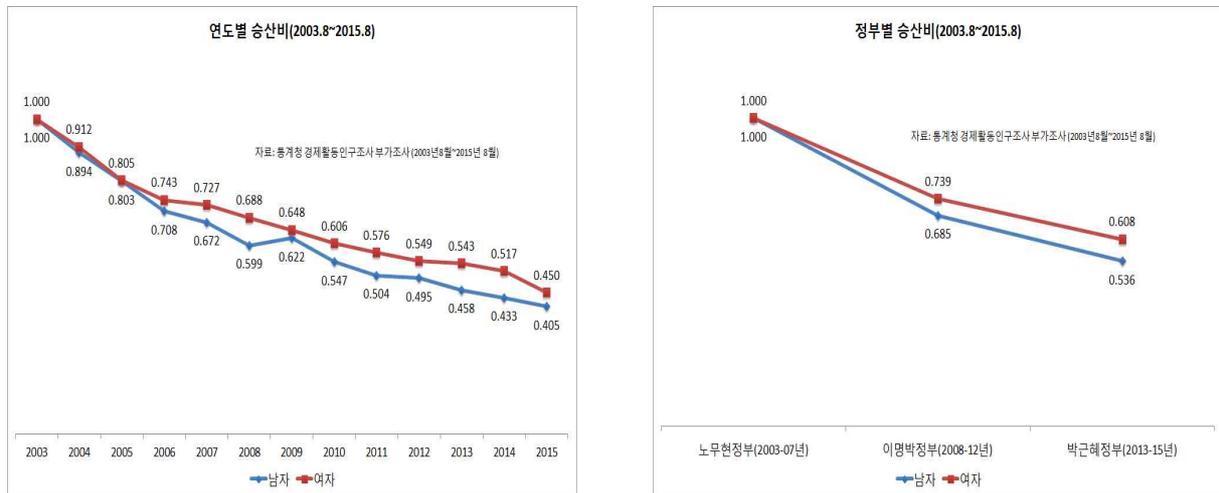


첫째, 남성은 승산비가 ‘고용주(1.519) > 정규직(1.000) ≒ 자영업자(0.959) > 비정규직(0.540) > 실

업자(0.248) > 무급가족종사자(0.154) > 비경제활동인구(0.141)' 순이다. 둘째,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5.096) ≙ 무급가족종사자(4.928) > 고용주(1.381) > 자영업자(1.047) ≙ 정규직(1.000) > 비정규직(0.922) > 실업자(0.463)' 순이다.

○ <그림9>는 <표2>의 분석결과 중 연령과 학력, 취업 및 고용형태를 통제했을 때 연도 및 정부 더미가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남녀 모두 해가 갈수록 혼인 확률이 떨어지고,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순으로 혼인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9> 성별 연도 및 정부별 승산비(2003.8~2015.8)



3. 결합로지분석 2

o <표3>은 임금수준이 혼인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로짓분석 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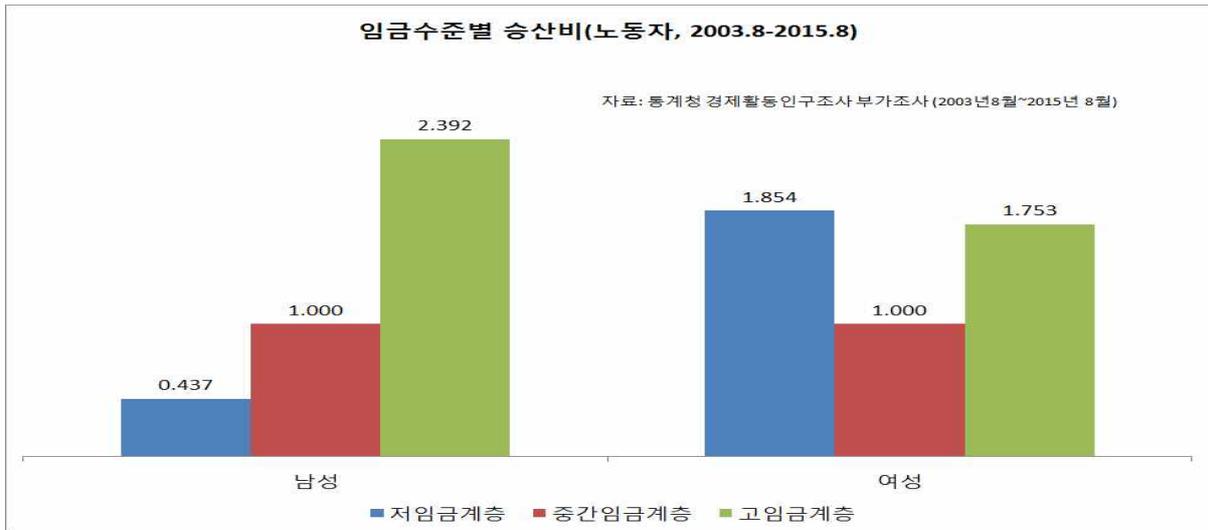
<표3> 혼인 확률 영향요인 (2003~2015년, pooled logit 분석, 20~39세 임금노동자)

	(모형1)						(모형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odds	P>z		odds	P>z		odds	P>z		odds	P>z	
연령	2.720	0.000	***	3.281	0.000	***	2.463	0.000	***	3.401	0.000	***
연령제곱	0.989	0.000	***	0.986	0.000	***	0.990	0.000	***	0.986	0.000	***
중졸	0.703	0.000	***	6.380	0.000	***	1.073	0.307		5.737	0.000	***
고졸	1.031	0.209		2.132	0.000	***	1.307	0.000	***	2.171	0.000	***
전문대졸	0.957	0.100		1.047	0.125		1.115	0.000	***	1.108	0.001	***
석사	1.431	0.000	***	0.943	0.360		1.324	0.000	***	0.873	0.039	*
박사	3.416	0.000	***	0.889	0.695		2.466	0.000	***	0.815	0.532	
학생(재학휴학생)	0.775	0.000	***	0.746	0.000	***	0.923	0.141		0.714	0.000	***
비정규직	0.546	0.000	***	0.921	0.001	***	0.727	0.000	***	0.847	0.000	***
저임금계층							0.437	0.000	***	1.854	0.000	***
고임금계층							2.392	0.000	***	1.753	0.000	***
2004년	0.908	0.030	*	0.921	0.150		0.963	0.405		0.890	0.044	*
2005년	0.824	0.000	***	0.860	0.009	***	0.848	0.000	***	0.829	0.001	***
2006년	0.736	0.000	***	0.806	0.000	***	0.845	0.000	***	0.809	0.000	***
2007년	0.712	0.000	***	0.783	0.000	***	0.812	0.000	***	0.784	0.000	***
2008년	0.657	0.000	***	0.739	0.000	***	0.728	0.000	***	0.760	0.000	***
2009년	0.674	0.000	***	0.733	0.000	***	0.743	0.000	***	0.746	0.000	***
2010년	0.583	0.000	***	0.643	0.000	***	0.657	0.000	***	0.632	0.000	***
2011년	0.520	0.000	***	0.592	0.000	***	0.613	0.000	***	0.599	0.000	***
2012년	0.538	0.000	***	0.576	0.000	***	0.630	0.000	***	0.593	0.000	***
2013년	0.485	0.000	***	0.590	0.000	***	0.558	0.000	***	0.612	0.000	***
2014년	0.466	0.000	***	0.533	0.000	***	0.560	0.000	***	0.547	0.000	***
2015년	0.420	0.000	***	0.461	0.000	***	0.505	0.000	***	0.465	0.000	***
상수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관측치	83,480			68,302			83,480			68,302		
모형설명력	0.285			0.395			0.306			0.4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8~2015.8 원자료  
 주: 대졸(학사), 정규직, 중간임금계층, 2003년을 기준더미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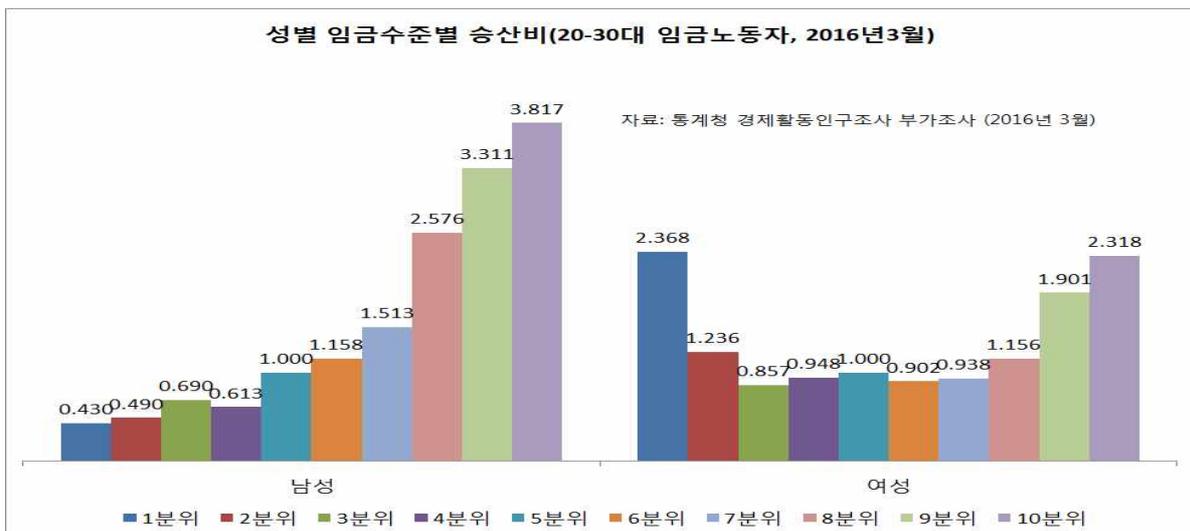
o <그림10>은 <표3>의 (모형2) 분석결과 중 연령과 학력, 고용형태를 통제했을 때 임금수준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첫째, 남성은 ‘저임금계층(0.437) < 중간임금계층(1.000) < 고임금계층(2.392)’ 순으로, 임금수준과 혼인 확률 사이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은 ‘저임금계층(1.854) > 고임금계층(1.753) > 중간임금계층(1.000)’ 순으로, 중간임금계층의 혼인 확률이 낮고,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의 혼인 확률이 높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파트타임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에 유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0> 성별 임금수준별 승산비(임금노동자, 2003.8~2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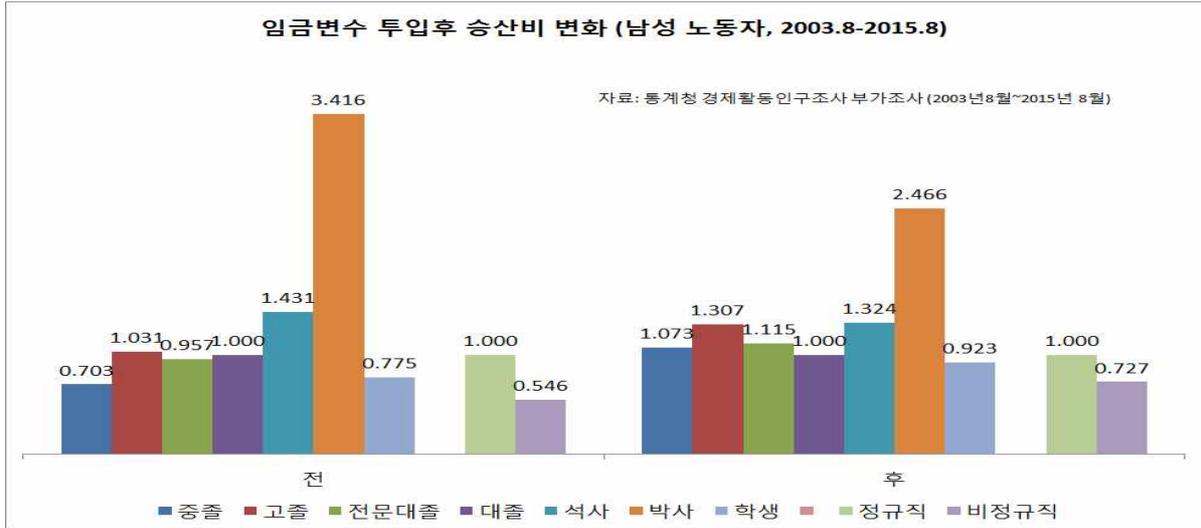
o <그림11>은 <그림10>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연령, 학력, 고용형태를 통제했을 때 임금수준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분석대상을 2016년 3월 현재 임금노동자로 한정하고, 임금수준을 10분위로 구분한 점만 차이가 있다. 첫째, 남성은 임금 10분위와 혼인 확률 사이에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은 1분위와 9~10분위만 혼인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고, 2~8분위는 혼인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림11> 성별 임금수준별 승산비(임금노동자, 201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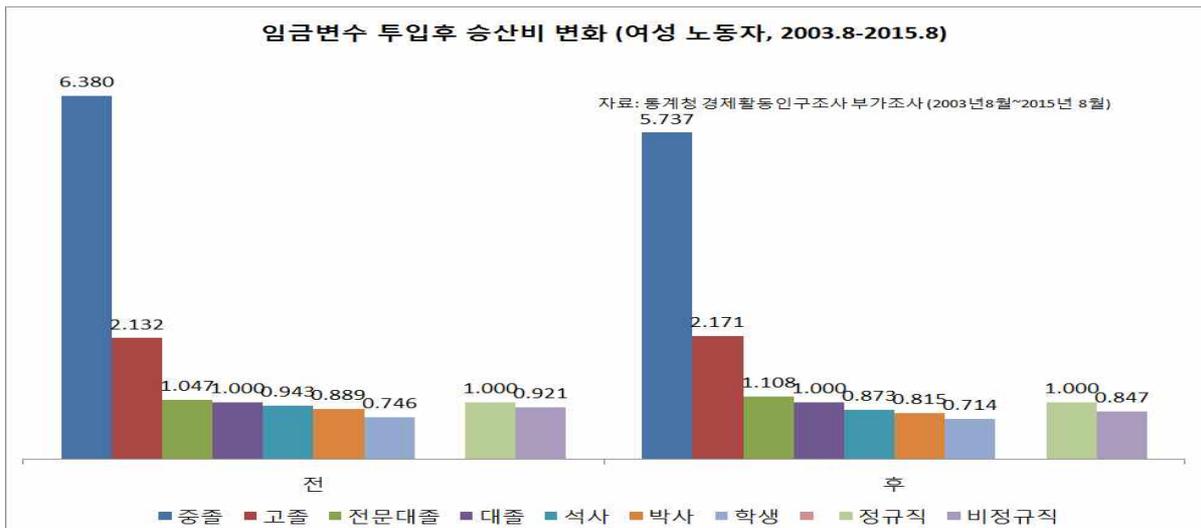


o <표3>의 (모형1)과 (모형2)를 살펴보면, 임금변수를 투입하기 전과 후에 학력과 고용형태 승산비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수준이 크게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임금수준이 혼인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그림12>와 <그림13> 참조).

<그림12> 임금수준 투입 후 승산비 변화(남성 노동자, 2003.8~2015.8)



<그림13> 임금수준 투입 후 승산비 변화(여성 노동자, 2003.8~2015.8)



#### 제4절 요약과 함의

○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인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이것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사회경제적 지위(고학력; 취업; 안정된 일자리; 적정임금수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성이 갈수록 결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남녀 모두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자녀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 여성은 남성과 달리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고,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혼인 확률이 낮다. 비경제활동인구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취업자의 혼인 확률이 높고, 남성과 달리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게다가 임금 1분위와 9~10분위만 혼인 확률이 높고, 임금 2~8분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체제에서 일과 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기혼여성의 상당수가 자녀출산 및 양육 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가계보조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혼인 영향요인과 관련해서는 패널자료를 사용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등 좀 더 심층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참고문헌>**

- 김경화(2004),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일과 결혼 - 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 김두섭(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3집 .
-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2015.12.
- 대한민국정부(2016a),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 윤자영(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 은기수(1999),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 이삼식(2016a),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6.1.
- 이삼식(2016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보건복지포럼』 2016.2.
-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1-1.
- 이상림(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 이상호·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2010.12
-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
-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